

문재인 “대부업 이자율 상한 20% 제한”

가계부채 3대 근본대책·7대 해법 공약 발표 ‘총량관리제’ 도입 “가처분소득의 150% 이내로” 채무감면 후 “미신고 재산·소득 발견시 무효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도입과 대부업을 포함한 이자율을 20%로 인하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했다. <관련 사진 7면>
문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더문캠 비상경제대책단이 주최한 ‘제2차 경제현안점검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가계부채 증가와 관련, 이명박·박근혜정부의 부채주도 성장정책이 실패가 원인이라고 규정하면서 “각종 부동산, 금융규제를 완화했는데 결과는 부동산 띄우

기도 실패, 경기 살리기도 실패, 가계부채만 폭증했다”고 단언했다.
문 전 대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것과 관련, “우리나라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취약계층의 이자부담이 늘어나고 한계가구수를 증가시켜 가계대출의 위기를 더욱 증폭시킬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면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문 전 대표는 가계부채 3대 근본대책과 7대 해법을 발표했다. 3대 대책

은 소득주도성장정책으로의 전환, 도덕적 해이를 막으면서 취약계층의 부담을 경감, 금융기관이 아닌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의 정책 운용을 제시했다.
이어 가계부채 7대 해법으로는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도입 ▲대부업 포함 이자율 상한 20%로 단일화 ▲회수불능채권 채무조정 ▲죽은 채권의 시효를 연장하거나 대부업체에 매각하는 폐단 방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 설치 ▲제1금융권의 고신용자·고소득자 중심의 안심전환대출을 제2금융권으로 확대 ▲비소구 주택담보대출 확대, 주택담보대출 상환능력 반영을 위해 기존 DTI(총부채상환비율)에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여신관리 지표로 활용할 것을 약속했다.
문 전 대표는 가계부채 총량관리제와 관

련, “가계부채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가계부채 증가율을 소득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고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5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회수불능채권 채무조정에 대해서는 “채무감면은 채무자의 연령, 소득, 재산, 지출정보를 면밀히 심사하고 채무감면 후 미신고 재산이나 소득이 발견되면 채무감면을 무효화하고 즉시 회수하도록 할 것”이라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겠다고 했다.
문 전 대표는 그러면서 “오늘 발표한 가계부채 해법은 금리인상 한파를 견디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특히 중점을 뒀다”며 “가계부채의 고통에서 벗어나 재기를 수 있다는 희망을 되찾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비례 승계’ 심기준
“부끄럽지 않게 책임 다하겠다”**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16일 “국민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위중한 시기에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아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의원은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탈당으로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했다.
그는 “나라가 어려울 때 국민들은 위대했다”며 “이번에도 국민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하나되는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강원도 원주 출신이자 민주당에서 현재 강원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심 의원은 “강원도는 통일한반도의 중앙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변방이자 산간지방”이라며 “저는 강원도를 사랑한다”고 말했다.
이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카운트 다운을 시작했다. 하나되는 대한민국,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출발이 되기를 염원한다”며 “지력을 모아 성공적인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10개월 늦게 시작하는만큼, 낮은 자세로 열심히 배우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이재오 “자유한국당은 대선 후보 내지 말아야”

이재오 늘푸른한국당 공동대표는 16일 “자유한국당은 더이상 정치세력이 아닌 만큼 이번 대선에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오 대표는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이 탄핵됐으면 국정을 운영했던 자유한국당은 더이상 정치세력이 아니다”며 “대통령을 잘못 모신 책임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당이 좌지우지되던 책임을 지고 반성한다는 선언을 하고 이번 대선에는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은 집에 가 있는데 저들은 대통령 한다고 몇명이 나온다”며 “자유한국당은 사퇴하고 당분간 조용히 반성해야 하며, 이번 대선에서 후보를 내지 말고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헌법1조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라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려면 헌법 1조를 수정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인 헌법 1조 1항을 “대한민국은 정의와 공평과 약자의 복지를 가치평가의 기준으로 하는 민주공화국이다”로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을 위하여 행사된다는 조항을 3항으로 신설하고, 기본권 부분도 인간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전주 방문한 손학규 16일 국민의당 대선주자인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왼쪽)가 전주를 찾은 가운데 한 식당에서 유성열 의원을 비롯해 관영·기초의원 등과 오찬을 하고 있다.

최영규 의원, 중국 수학여행 안전 대책 미흡 지적

“사드배치로 안전 우려... 도교육청, 학교 결정사항 이유로 안전에 손 놓고 있다”

최근 정부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DD·사드) 배치로 중국의 반한 감정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도교육청은 도내 학생들의 안전에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선 학교가 중국 수학여행을 추진함에 도교육청은 학생들의 안전지침과 매뉴얼 등 안전에 대비하지 않은 것이다.
특히, 타 시도 처럼 중국으로의 여행을 재검토하거나, 학생 안전문제를 이유로 중국 수학여행을 취소하고 다른 지역으로 행선지를 변경·권유하는 공문조차 보내

지 않았다.
대구광역시교육청은 지난 10일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최근 국내외 정세를 이유로 해외 수학여행을 계획하는 학교는 일정을 취소·연기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부산광역시교육청도 중국으로 수학여행을 추진하는 학교에 공문을 보내 대만, 일본 등으로 수학여행 목적지를 바꾸게 했으며, 충남도교육청 역시 1학기에 중국으로 수학여행을 계획하는 학교 20곳 중 14곳이 가지 않기로 했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최영규 의원은

“사드배치로 인해 국내외 정세가 불안해 해외여행 안전이 우려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도교육청은 최근 상황을 고려해 중국으로 수학여행을 자제하라는 공문은 커녕 학교의 결정사항이라는 이유로 안전에 손을 놓고 있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중국 정부 사드 보복에 따라 양국 관계가 악화되고 반한 감정이 일어 학생 안전을 위해 중국 여행을 전면 취소하거나,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 차원에서 미리 현장답사를 실시하라”고 주문했다. /인재용 기자

‘불출마’ 황 대행, 대선관리 본격 돌입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 주제 “공정선거 철저 준비” 당부

대통령 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16일 대선 관리체제에 본격 돌입했다.
황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에 따라 5월9일 열리는 제19대 대선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이준식 사회부총리를 비롯해 국방부·행정부 장관, 국조실장, 기재부·외교부·법무부 차관,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황 대행은 “이번 선거는 우리 사회를 통합과 화합, 한 단계 성숙한 민주주의로 이끌어 가야 하는 중요한 선거”라며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계부처에는 “불법 선거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처, 공직자의 선거 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황 대행은 전날 불출마를 공식화하면서 “세계 주어진 마지막 순간까지 오직 나라와 국민만 생각하며 위기관리와 민생안정

에 최선을 다하고, 두 달도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선관위와 협조해 ▲법정부적 공명선거 추진체계 구축 ▲법정 선거사무 추진 ▲공무원 선거 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 ▲불법 선거운동 단속 ▲공명선거 및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향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추진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재외선거 참여를 늘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인터넷과 SNS를 이용한 사이버 선거사범 단속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안에 전국 7개 권역 선거담당 공무원 7800명을 대상으로 선거인명부 작성지침 등 법정 선거사무와 관련한 권역별 교육을 실시한다. 공무원의 선거 중립과 관련한 금지 행위 등을 이달 안에 통보하고 선거기간 중 특별 감찰활동도 확대한다. 모든 경찰관서에는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도 설치돼 24시간 단속 체계도 가동한 상태다. /뉴시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가축 전염병 살처분 매몰지 관리 등 경제·민생 현안도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그동안 어렵게 추진해 온 주요 정책과 사업들을 마무리까지 전력을 다해 마무리할 것 다짐했다. /뉴시스

더문캠 특보단장에 김태년·민병두

문재인 전 대표의 선거캠프인 더문캠은 16일 김태년·민병두(3선) 의원을 특보단장에 임명하고, 박법계(재선) 의원을 총괄 부단장으로 선임하는 등 총 17명의 의원이 특보단에 합류했다고 밝혔다.
민 단장은 민주정책연구원장을 지낸 당내 대표적인 전략통으로 꼽힌다. 김 단장은 국회 정치개혁특위 간사와 예결위 간사를 지냈다. 박 부단장은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 특보 이개호(재선) ▲정무특보 김철민·박찬대·송기현·신동근 ▲문화예술특보 도종환(재선) ▲농축수산산업특보 김현권·위성곤 ▲과학기술특보 문미옥 ▲환경노동특보 강병원 ▲인권특보 박주민 ▲청년특보 김해영 ▲안보특보 김병기 ▲교육특보 전재수 의원이 특보단에 합류했다. /뉴시스

국민의당 박주선 “새만금을 서해안시대 핵심거점 만들 터”

대선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당 박주선 국회 부의장은 16일 “호남 집권의 꿈을 실현해 30여년 간 지지부진했던 새만금을 서해안시대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 부의장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회견을 열고 “새만금 개발에 획을 긋고 후발투자의 미증물이 돼 새만금에서 대한민국의 신 성장동력을 찾겠다”라며 “동북아 경제의 거점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새만금은 서해안시대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잡아 이점이 많지만 환만·철도 인프라는 아직 미약한 수준이다”라며 “복합리조트 개발, 물류 인프라 확충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호남 집권의 꿈을 실현하겠다는 그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한 발언도 이어갔다.
그는 “호남 표를 구걸하면서도 호남 총리 운운하는 문재인 전 대표의 행태는 야권의 심장부인 호남을 정치의 변방으로 취급하는 것이다”라며 “이는 야권의 심장부인 호남을 패권 세력의 들러리로 취급하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뉴시스

박영선 “이제 문재인 대세론 없다”

안희정 충남지사의 의원멘토단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16일 “전북도민들이 안 지사에게 힘을 실어주면 반드시 역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영선 의원과 김운덕 전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은 끝났고, 그대안(그래도 대통령은 안희정)을 말하고 있다”며 “이제 문재인 대세론은 없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송성환 의원, ‘전북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전북도의회 제341회 임시회에 시군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지원 근거가 될 조례가 상정돼 눈길을 끌고 있다.
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송성환 의원은 전북도가 시군의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북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주민으로부터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를 받아 설치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지사에게 비용의 일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생활폐기물 배출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일선 시군의 신청을 받아 설치를 지원하며 이는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거점배출시설을 단독주택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과 동일하다.
현재 일선 시군 단독주택 지역의 경우 아파트와는 달리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집하장 등이 없거나 부족해 상습무단투기 및 집 앞에 쓰레기를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송성환 의원은 “일선 시군 단독주택의 쓰레기 처리 문제로 많은 민원을 들어 왔지만, 쓰레기 처리 문제는 해당 시군의 사수에 해당돼 도의원에서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어려웠다”며 “전북도가 지원해줄 수 있는 최대한의 방안을 고민 끝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0일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24일 최종 결정된다. /인재용 기자

정호영 의원, 사드보복 경제적 피해 대책 주문

사드배치에 따른 노골적인 중국의 보복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도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정호영 의원은 지난 15일 제341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의 보복조치가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도 중국사무소를 비롯해 중국내 거주하는 도민들의 안전 확보가 중요하다”며 전북도에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중국이 까다로운 통관 절차를 내세우면서 통관을 거부하는 사태도 발생해 도내 대중국 수출기업들이 매출 먹고 있다”며 도내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검토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송호진 지사는 “최근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내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상해사무소는 유관기관들과 비상연락 체제를 유지하면서 최우선적으로 직원들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대응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의 비관세 무역장벽이 심화되고 있어, 대중국 수출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8개 기관이 참여하는 대응반을 구성해 공동으로 기업동향을 수시로 파악해 대응하고 신흥국 시장 공략으로 수출시장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이용호 의원, 서남대 살리기 행보 ‘분주’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이 서남대 정상화의 새로운 활로 모색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용호 의원은 지난 15일 서남대 총장실에서 김경안 총장 등 학교 관계자, 서남대 정상화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 등과 함께 최근 정상화 대책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서남대는 지난 1월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정상화 컨설팅에서 재정기여자를 발굴하지 못해 폐교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그러나 서남대는 2~3곳의 새로운 재정기여자를 발굴,추천 받아 정상화의 발판을 마련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용호 의원은 “정상화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남대를 지속가능한 대학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라며, “지역사회 및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있고, 서남대 정상화가 지역발전에도 기여하는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제 주체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